

독서문화 진흥, 무엇이 문제인가?

유 재 천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우리에게 있어 국민 독서문화 진흥이라는 과제는 출판산업의 생존과 연관된 문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독서가 인류의 지적(知的) 유산을 계승하고 재창조하며 전승하는 구실을 담당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사람을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독서의 바로 이와 같은 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 하면 도덕적이며 이성적인 존재야말로 21세기 세계질서의 근간이 될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제도의 원초적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 진흥정책에 대한 논의는 그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출판계와 학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많은 정책을 건의하기도 했다. 정부 또한 독서 문화공간 조성,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 독서 생활화 운동, 건전 독서풍조 조성 등 꾸준히 독서 진흥시책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책의 해' 다음해인 199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이 법은 말할 것도 없이 독서 진흥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규범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에 규정된 바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그 동안 얼마나 이 법에 규정된 정책을 충실히 시행해 온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조항에 대한 시행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첫째, '도서관및독서진흥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제9조의 시행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법 제정 후 만 4년이 지났으나 기금이 전혀 조성되지 않아 감사원의 감사에서 폐지가 건의되고, 새 정부의 기금 정리 대상에 들어갈 정도로 한심한 상태가 되었다.

둘째, 이 법 제10조는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동 위원회의 직무를 열거한 각 호 가운데 일부를 보면, ⑤ 기금의 조성 계획 ⑥ 기금의 관리 운영계획 ⑦ 기금의 관리 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다. 이 같은 조항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의 조성 상황에 건주어 볼 때 이 위원회가 제구실을 다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위원회는 1년에 1-2회 정도 회의를 열어 도서관 발전, 도서관 협력망 운영, 독서진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운영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금 조성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보면 1997년까지 430관을 확보하고 2011년까지 750관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1997년까지 430관 확보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긴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4년 동안 매년 약 23관씩 건립하겠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계획은 인구 6만명당 1관을 기준으로 세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2011년에 이르러 공공도서관의 수가 그 같은 인구 비례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현재 일본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은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14년 후에야 우리의 공공도서관수가 지금의 일본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 된다. 과연 이러한 계획이 GNP 성장에 따른 독서진흥예산 확보 가능성 예측과 얼마나 부합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넷째,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39조는 문고의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 등에 대하여 문고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시장과 군수는 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 및 공중 이용시설 등에 사립 문고를 설립할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법의 시행령 제33조는 사립 문고의 설립 요건이 되는 조건들, 예컨대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살고 있는 1,30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문고는 없다. 이 조문 또한 사문화(死文化) 되어 버렸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 정부의 독서 진흥정책은 국회에 제출할 연차 보고서용 이상이 못된다는 비판을 받을 만 하다고 하겠다.

독서 진흥이 왜 필요한지, 현재의 독서 진흥정책과 학교 독서교육에서의 문제는 무엇인지 또한 개선책이랄까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제안들이 수용되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일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즉, 독서 진흥정책의 문제는 나라를 경영하는 지도자—대통령, 국무총리, 해당 부서 장관—의 독서진흥이 왜 필요하며, 그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신념, 투철한 인식, 그리고 열정에 달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그것은 또한 주무 부서 관료들이 독서 진흥에 대한 ‘진정한 신도(信徒, true believer)’들이가의 문제에 귀결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도서관과 독서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제도의 틀을 만들어 놓았지만 유명무실해진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역시 사람(관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장관이나 차관이, 아니면 실무 관료가 독서 진흥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가진 ‘진정한 신도’라면 기금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기금의 액수가 아니라 노력하는 자세, 행동으로 보여주는 열의일 것이며 기금 이야기는 하나의 예로 든 것일 뿐, 정책의 구현 전반에 걸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